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원

- 2025년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 증액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 <'23> 34.95조원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안> 37.6조원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세부적인 예산은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최영범 (044-202-7026) |
| | | 담당자 | 서기관 | 남성욱 (044-202-7034)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 규모는 **37조 6,15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액**

* <'23> 34.95 → <'24> 33.7 → <'25> 35.3 → <'26안> 37.6조원

◇ 유사·중복 사업 조정, 경비 절감, 운영체계 효과성 제고 등 지출 효율화 선행 → 국정과제 투자 위한 재원 마련

I. 총지출

- (총괄) 37조 6,157억원, '25년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
- (일반회계) 5조 8,991억원, '25년 대비 7,522억원(14.6%) 증가
 - * 국민취업지원(1조 128억), 두루누리(9,443억), 청년도약장려금(9,080억) 등
- (특별회계) 7,339억원, '25년 대비 1,259억원(20.7%) 증가
 - * 폴리텍대학(3,150억),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1,926억), 사회적기업육성(321억) 등
- (기금) 30조 9,827억원, '25년 대비 1조 3,924억원(4.7%) 증가
 - * 구직급여(11조 5,376억), 산재급여(8조 1,463억), 모성보호(4조 728억) 등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단위: 억원) 】

| 회계·기금별 | '25년(A) | '26년안 | | |
|------------|---------|---------|---------|--------|
| | | 정부안(B) | 증감(B-A) | 증감률(%) |
| ■ 총지출(a+b) | 353,452 | 376,157 | 22,705 | 6.4 |
| - 예산지출(a) | 57,549 | 66,330 | 8,781 | 15.3 |
| · 일반회계 | 51,469 | 58,991 | 7,522 | 14.6 |
| · 특별회계 | 6,080 | 7,339 | 1,259 | 20.7 |
| - 기금지출(b) | 295,903 | 309,827 | 13,924 | 4.7 |
| · 고용보험 | 178,066 | 184,789 | 6,723 | 3.8 |
| · 산재보험 | 100,176 | 104,506 | 4,330 | 4.3 |
| · 장애인고용 | 9,372 | 10,041 | 669 | 7.1 |
| · 임금채권 | 6,285 | 8,481 | 2,195 | 34.9 |
| · 근로복지 | 2,004 | 2,011 | 7 | 0.3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2조 2,705억원)

일터의 혁신

안전 일터

- ☞ 민간·지자체 등 가용 자원 총동원
→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 구축
- ☞ 영세사업장 高위험요인 집중관리
- ☞ 산재처리기간 단축 등 보상체계 강화
- ☞ 산업안전 R&D 등 예방체계 고도화

공정 일터

- ☞ 권리밖 노동자에 대한
총총한 지원체계 구축
- ☞ 대규모 실태조사 등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
- ☞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

행복 일터

- ☞ 주4.5일 지원 신설
- ☞ 출산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지원 지속 확대
- ☞ 사업주·동료부담
최소화 및 사용여건 개선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안전망 확충

- ☞ 실업·구직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 대지급금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회복지원 확대
-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미래 인재육성

- ☞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
- ☞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대응체계 구축
- ☞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AI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맞춤형 지원강화

- ☞ **청년**: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
-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인 지원 등 어려움 해소

II. 주요 내용

[1] 일터의 혁신: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1. 안전 일터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일터]

☑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대폭 확대, 산재보상체계 강화

○ (현장 밀착형 예방) 민간(노사단체 등)·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 셀 틈 없는 산재예방체계 구축

- ✓ NEW 안전한일터지킴이: <’26안> 446억(1천명, 노사단체 등 민간,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 ✓ NEW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26안> 143억(자치단체 협업, 지역별 특성 고려)
- ✓ NEW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26안> 111억(일반국민), NEW 기업안전보건공시제: <’26안> 10억
- ✓ 패트롤카: <’26안> 483대(+140대), 민간기술지도: <’26안> 513억(33.2만회)

○ (고위험 집중관리)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 개선

- ✓ 산재예방 설비지원: <’25> 1,107억 → <’26안> 1,610억(+503억, 17,458개소)
 - ↳ NEW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26안> 433억(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최대 90% 보조)
- ✓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폭염근로자 보호): <’25> 200억 → <’26안> 280억(+80억)
- ✓ 안전동행지원: <’26안> 3,320억,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26안> 820억(+183억)
- ✓ 산재예방시설 용자: <’25> 4,588억 → <’26안> 5,388억(+800억, 3,050개소)

○ (보상체계 강화)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 등

- ✓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25> 83억 → <’26안> 127억(+44억)
 - ↳ NEW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NEW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NEW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
- ✓ 산재병원 지원: <’25> 797억 → <’26안> 1,228억(+431억)
-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5> 116억 → <’26안> 124억(+8억)
 - ↳ NEW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 NEW 산재근로자의날 행사(2억)

○ (예방체계 고도화) 산업안전 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 등

- ✓ NEW 산업안전 R&D: <’26안> 16억,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시스템(+10억)

2. 공정 일터 【일한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터】

✓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임금·복지·안전 등) 완화 위한 다각적 지원, 대규모 실태조사 기반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선 지원 확대

○ **(권리밖 노동자 지원)**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 ✓ NEW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26안> 13억(30개소, 상담사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 NEW 정규직 전환지원: <'26안> 69억(사업 복원, 신규 1,500명)
- ✓ NEW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2억, 대금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법률공단) 지원)
-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예방: <'26안> 4억, 신용보증대위변제: <'26안> 377억(+60억)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26안> 33억(+11억),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26안> 22억
- ✓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25> 218억 → <'26안> 283억(+65억)

○ **(임금 체계)** 대규모 실태조사 통한 임금정보 제공,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 지원 → 동노동임 기반 마련

- ✓ 대규모 실태조사: <'25> 25억 → <'26안> 54억(+29억, 표본 33천개→66천개)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5> 408억 → <'26안> 427억(+17억, 5,100개소)
-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 지원: <'25> 48억 → <'26안> 64억(+16억, 4개 업종)

○ **(격차 해소)** 원·하청, 대·중소 격차 해소 사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

- ✓ NEW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26안> 349억(격차 해소 사업 통합·개편)
- ✓ 공동근로기금: <'26안> 182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6안> 130억
- ✓ 중소기업기금 재정지원: <'25> 204억 → <'26안> 211억(+7억)

○ **(권익 보호)** 노·사 등 민관 협업 통한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

- ✓ NEW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26안> 56억(노동단체 37억, 비영리법인 19억)
- ✓ NEW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 <'26안> 29억(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100개소 등)
- ✓ NEW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26안> 5억(노동부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와 병행)
- ✓ NEW AI 노동법 상담: <'26안> 20억(AI 기반 대국민 상담 + 상담 내용 기반 사건접수 지원)
- ✓ NEW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및 노사관계전문가 과정: <'26안> 12억
-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26안> 21억(+9억)

3. 행복 일터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일터】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장 안착 유도 및 지속 확대

○ (장시간 근로개선)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신설, 유연근무 지원 확대

- ✓ NEW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 <'26안> 276억, NEW 주 4.5 특화컨설팅: <'26안> 17억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26안> 244억
- ✓ NEW 육아기 10시 출근제: <'26안> 31억(17백명)

○ (일하는 부모 지원) 저출생 반등이 계속되도록 육아 지원 지속 확대

- ✓ 모성보호육아지원: <'25> 4조 225억 → <'26안> 4조 728억(+503억)
 - ↳ 출산급여: <'26안> 3,792억(최대 210→220만원), 배우자출산급여: <'26안> 269억(최대 160→168만원)
 - 유산사산급여: <'26안> 27억(최대 210→220만원), 난임치료급여: <'26안> 25억(일 최대 8→8.4만원)
 - 육아휴직급여: <'26안> 3조 3,936억,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안> 2,680억(+345억)
- ✓ NEW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 <'26안> 10억

○ (사업주·동료 지원) 사업주·동료 부담 최소화 및 사용 여건 개선

- ✓ 육아휴직 지원금: <'25> 1,236억 → <'26안> 1,566억(+330억, 3.9만명)
- ✓ 대체인력지원금: <'25> 1,194억 → <'26안> 1,303억(+109억, 1.7만명)
 -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 30인이상 130만, 30인미만 140만
- ✓ 업무분담지원금: <'26안> 252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26안> 443억(2.7만명)
 -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 30인이상 40만, 30인미만 60만

[참고: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26년안 1,180억)]-----

| | |
|----------------------|-----------------------------------------|
| NEW 인건비: 321억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신규고용 시, 월 50~9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 NEW 창업: 300억 | 사회적기업 창업팀 육성(약 500팀, 팀당 평균 5천만원 지원) |
| 판로·성장: 192억 | 공공구매 등 맞춤형 판로개척 및 단계별 성장지원금 지원 |
| NEW 생태계: 187억 | 자치단체, 민간 협업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성과보상 강화 |
| 기타: 180억 | 교육 및 인식개선, 투자 유치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등 |

[2]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1.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 보호】

✔ 경기둔화 극복·일상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안전망”을 충분하게 구축

○ (실업자) 실업·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 구직급여: 〈'25〉 10조 9,171억 → 〈'26안〉 11조 5,376억(+ 6,205억, 163.6만명)
- ✔ 조기재취업수당: 〈'25〉 5,255억 → 〈'26안〉 5,852억(+597억, 11.7만명)
- ✔ 실업크레딧지원: 〈'25〉 637억 → 〈'26안〉 667억(+30억)

○ (체불근로자)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위한 대지급금, 용자 확대

- ✔ 대지급금 지급: 〈'25〉 5,293억 → 〈'26안〉 7,465억(+2,172억, 11.2만명)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 ✔ 체불청산지원용자: 〈'26안〉 706억(1만명), 생활안정용자: 〈'26안〉 911억(3.4만명)
- ✔ 무료법률구조지원: 〈'26안〉 117억(5.6만건), 무료법률서비스지원: 〈'26안〉 12억(3천명)

○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및 회복 지원 강화

- ✔ 산재보험급여: 〈'25〉 8조 43억 → 〈'26안〉 8조 1,463억(+1,420억, 42만명)
-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5〉 602억 → 〈'26안〉 691억(+89억, 11만명)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26안〉 143억

○ (장애인)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장려금 지원 확대

- ✔ 장애인고용장려금: 〈'25〉 3,720억 → 〈'26안〉 4,014억(+293억, 81만명)
- ✔ ^{NEW}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6안〉 19억(의무고용미달사업체 고용 확대시 인센티브)

○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실업급여 등 안전망 확충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5〉 8,851억 → 〈'26안〉 9,443억(+592억, 108만명)
- ✔ 자영업자 실업급여: 〈'25〉 184억 → 〈'26안〉 199억(+15억, 36백명)

2. 미래 대비 인재 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투자 및 연계]

✓ 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주력 → **직업훈련 체질 전면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 (훈련 개편)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25> 4,781억 → <’26안> 5,213억(4.9만명)
 - ↳ **NEW** Top-tier AI 융복합 과정 1,338억, 선도기업 및 일반과정 3,865억,
훈련장려금 11.6→20만원 인상,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 ✓ **NEW**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 <’26안> 45억, 첨단산업학과 신설(+2개과)
NEW 폴리텍 피지컬 AI 적용훈련 테스트베드: <’26안> 120억, **NEW** AX과정(15억, 비학위)
- ✓ **NEW** 한기대 AI 교·강사 양성: <’26안> 28억, **NEW** AI 훈련 평가 시스템: <’26안> 49억
- ✓ **NEW** 중소기업 AI훈련센터: <’26안> 89억, **NEW**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6안> 150억(30개소)
- ✓ **NEW** 중소기업 시기초·융합과정: <’26안> 308억(융합과정 훈련비 최대 90% 지원)

○ (인력 공급) 산업수요 기반 양성 → 필요 인력 신속 공급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5> 641억 → <’26안> 821억(+180억, 2.4만명)
- ✓ **NEW**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26안> 11억(300명)
- ✓ **NEW**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26안> 15억(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인력수급 전망 등)
- ✓ 산업인자위 지원: <’26안> 98억(+5억),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6안> 164억(+3개소)

○ (지역고용 활성화) 광역간(초광역)·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체계 구축

-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25> 1,079억 → <’26안> 1,926억(+847억)
 - ↳ **NEW** 광역이음(300억), **NEW** 기초이음(200억), **NEW** 고용둔화대응(200억) 등
- ✓ 고용촉진장려금: <’26안> 207억(45백명), 고용유지지원금: <’26안> 702억(3.8만명)

○ (고용서비스 강화)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인프라 고도화

- ✓ 직업안정기관 운영: <’25> 551억 → <’26안> 593억(+42억, 통합공공고용서비스 +2개소)
-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25> 92억 → <’26안> 119억(+27억, 구직자 상담안정지원 +11억 등)
- ✓ **NEW**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AI 인프라 확충: <’26안> 32억(고용AI 관련)

3.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미스매치 해소&노동시장 활력 강화】

✓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요인**(숙련·보상·정보 등) **해소**

① **청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집중하여 효과성 제고

- **(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 부담 완화 및 구직여건 개선, 장려금·일경험 등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 ✓ 국민취업지원제도: <'25) 8,457억 → <'26안) 1조 128억(+1,671억, 35만명)
 ↳ 30.5만명 → 35만명(+4.5만명),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0만원(+1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 7,772억 → <'26안) 9,080억(+1,308억, 10.5만명)
 ↳ 기존 1·2유형 → ①수도권, ②비수도권형으로 개편
 ①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에 월 60만원 12개월간 지원
 ②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기업에 월 60만원 12개월 + 청년에 2년간 480~720만원 지원
- ✓ 청년 일경험 지원: <'26안) 2,076억(인턴, 프로젝트 등 4.3만명)
-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26안) 242억 (78.7만명, 50% 할인)

- **(밀착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중심 재학·졸업생 밀착 지원 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 확대

-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대학일자리+센터): <'26안) 1,068억(총 120개교 지원)
 ↳ 대학재학생 15.5만명, 졸업생 5만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 일반고 특화훈련: <'25) 456억 → <'26안) 553억(+97억, 6,300명)
- ✓ 미래유망고졸인재양성: <'26안) 125억(85개 학과 → 95개 학과)
- ✓ 청년미래플러스: <'25) 20억 → <'26안) 41억(직장적응지원 프로그램 보강)

- **(특화 프로그램)** 쉬었음 청년 등 특성 고려한 맞춤형 특화 지원

- ✓ 청년도전지원사업(도전+성장프로그램): <'25) 716억 → <'26안) 758억(+41억)
- ✓ **NEW**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26안) 60억(쉬었음청년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 **NEW** 경계선지능청년일자리지원: <'26안) 3억(2백명, 진로설계·구직기술 등 지원)

2 **중장년** : 일자리기회 · 재취업지원 확대 →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

- **(기회 확대)** 경력전환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 및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

- ✓ **NEW** 고령자통합장려금: <'26안> 107억(34백명, 비수도권 기업 우대(월 +10만원))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25> 55억 → <'26안> 102억(+47억, +5천명)
- ✓ 중장년 경력지원제: <'25> 36억 → <'26안> 84억(+48억, 2천명)
- ✓ **NEW**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시범): <'26안> 18억(1천명)
 - ↳ 인력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6·12개월 근속인센티브(총 360만원) 지원

- **(재취업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 제공

- ✓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 <'25> 183억 → <'26안> 229억(+46억)
 - ↳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 서비스 확대(+4억), 내일센터 2개소 확충·컨설턴트 보강(+35억)
 - NEW** 중장년고용네트워크(2억), **NEW** 지역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5억)

3 **장애인** : 좋은 일자리 및 고용안정,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일자리 확대)**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25> 529억 → <'26안> 602억(+74억, +30개소)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26안> 185억(+34억, 훈련수당 일 1.8만원 → 3.5만원 인상)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6안> 275억(+10억, 구직촉진수당 월50→60만원 인상)
- ✓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컨설팅: <'26안> 8억, 장애인 인턴제: <'26안> 66억
- ✓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장애인전환지원: <'26안> 38억(직재시설 전환성공지원금 신설 등)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5> 606억 → <'26안> 645억(+39억)
 - ↳ **NEW** 발달장애인지적자훈련프로그램(16억), 디지털훈련센터 확충(+1개소)

- **(고용 안정)** 근로 장벽 제거를 통한 직장 생활 어려움 해소

- ✓ 근로지원인 지원: <'25> 2,470억 → <'26안> 2,659억(+189억, 11,500명)
- ✓ 중증장애인가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5> 66억 → <'26안> 85억(+19억, 15천명)
- ✓ 보조공학기기 지원: <'25> 198억 → <'26안> 200억(+2억)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2조 2,705억원)

일터의 혁신

안전 일터

- ☞ 민간·지자체 등 가용 자원 총동원
→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 구축
- ☞ 영세사업장 高위험요인 집중관리
- ☞ 산재처리기간 단축 등 보상체계 강화
- ☞ 산업안전 R&D 등 예방체계 고도화

공정 일터

- ☞ 권리박 노동자에 대한
총총한 지원체계 구축
- ☞ 대규모 실태조사 등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
- ☞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

행복 일터

- ☞ 주4.5일 지원 신설
- ☞ 출산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지원 지속 확대
- ☞ 사업주·동료부담
최소화 및 사용여건 개선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안전망 확충

- ☞ 실업·구직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 대지급금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회복지원 확대
-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미래 인재육성

- ☞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
- ☞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대응체계 구축
- ☞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AI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맞춤형 지원강화

- ☞ **청년**: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
-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인 지원 등 어려움 해소



안전 일터



현장 밀착형 예방

01 민간(노사단체 등)·지방정부·국민과 함께 빈틈없는 산재예방체계구축

AS-IS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조선업은 노동자 안전 취약

TO-BE

안전보건 지식·경험이 풍부한 안전한 일터지킴이 채용
→ 불시 순회점검을 통한 산재예방 커버리지 확대

*건설업·조선업·제조업 등 1,000명 운영

AS-IS

중앙정부 중심 산재예방 지원

TO-BE

지역별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지원
→ 사각지대 해소

*광역자치단체 1곳(건설사업)당 평균 14억 지원(총 10곳)

AS-IS

위험상황신고 등에도 인센티브 부재

TO-BE

산재위험 상황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국민 참여 산재예방

02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 강화

AS-IS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TO-BE

대규모 위험업종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강화를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추진

고위험 집중 관리

01 영세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 지원 강화

AS-IS

영세사업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

TO-BE

영세사업장(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설비 비용 지원 (5,600개소)

AS-IS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 질환 예방 장비부족

TO-BE

영세사업장 약 9천개소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02 사업장 주도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 확대

AS-IS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어려움

TO-BE

-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재발방지 지원(8,000개소)
- 컨설팅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확대(2,000개소)

**보상
체계
강화**

01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해 처리체계 구축

AS-IS

산업재해 처리의
전문성 및 복잡성 높음

TO-BE

산업재해 입증에 어려운 취약노동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국선대리인 선임**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2,750건

AS-IS

산업재해 판단 사례 제공 부족

TO-BE

다양한 산업재해 판단 사례 **17만건 공개**

02 산재노동자 치료 및 재활지원을 통해 빠른 직업복귀 지원 강화

AS-IS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 제도
분산 운영 → 정보접근성 제약

TO-BE

^{가칭}「산재노동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운영
→ **조기 재취업 등 직업복귀**

*치료 및 재활부터 취업까지 도달 지원(3만명)

**예방
체계
고도화**

산재예방을 위한 R&D 및 AI·빅데이터 활용

AS-IS

- 사업주에게 기술지원·감독대상 선정이유를 설명하는 시스템 부재
- 수동적·폐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산재예방 R&D 부재

TO-BE

- 사업장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위험도와 취약요인을 **사업주, 노동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
-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기술·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공정 일터



권리 밖 노동자 지원

01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AS-19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부족

TO-BE

두터운 보호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12,000명 → 19,000명

02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신설**

AS-15

수요자와 밀접한 지역 단위의 취약노동자 법률·노무상담 인프라 부족

TO-BE

전문성·접근성을 갖춘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

03 노무제공자 분쟁조정 지원 **신설**

AS-19

보수·산재입증 등 노무제공자의 분쟁에 대한 조력·지원 부족

TO-BE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신설

→ 특고·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 특고·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04 정규직 전환지원

AS-15

신규 지원 없음

TO-BE

신규 1500명 지원

0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AS-15

가사근로자 고용 유인 미흡

TO-BE

● 전체 인증기관 및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 지원 센터 확충(2~3개)

06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AS-15

- 국고보조율 50%
- 대규모 투자 한계

TO-BE

자치단체 사업 국고보조율 70%로 상향

임금 체계

01 대규모 실태조사

AS-IS

임금·직무정보 부족

TO-BE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등 정보 제공**

02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AS-IS

기업 자가 진단 애로, 노사 자율 문제 해결 역량 부족

TO-BE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 방안 도출
(컨설팅 5,100개소)

03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AS-IS

노동시장 내 연공급, 무체계가 대다수

TO-BE

일한만큼 보상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격차 해소

01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AS-IS

원청-협력사 등 노동시장 격차 심화

TO-BE

지역 주도 발굴, 참여 주체 다양화, 근로자 직접 지원 중심
→ **협력사 임금·복지 등 격차 완화**

0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AS-IS

제조업 중심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TO-BE

건설업 시범 도입 등 **새 업종 지원 확대**

권익 보호

01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지원

AS-IS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없음**

TO-BE

정책개발, 교육·상담, 권익향상 지원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02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

AS-IS

대립적 노사관계로 자율 해결 기반 부족

TO-BE

협력적 노사관계 및 상생 노사문화 구축
→ **일터의 현안을 노사 자율로 해결**

03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AS-IS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

TO-BE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하여 **권리구제 및 상담지원**

04 AI 대국민 노동법 상담

AS-IS

노동자·사업주의 노동법 접근성 부족

TO-BE

AI 상담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 지원**



행복일터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주 4.5일제 지원 패키지 **신설**

AS-IS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 획일적 근무형태



TO-BE

-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운영한 기업에 확실한 지원*
(위라벨+4.5 지원 신설, 1인당 20~60만원)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 우대 지원
- 주4.5일제 도입 후 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추가 지원
(위라벨+4.5 지원 신설, 1인당 60~80만원)
- 주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근무체계개편 등 **컨설팅 지원(신설)**
-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도입·운영 기업 지원(신설)
*1인당 월 30만원

일하는
부모

저출생 반등 지속을 위한 육아지원 강화

AS-IS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



TO-B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해주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 16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월 상한액 인상
*(25년) 210만원 → (26년)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5년) 1,607,650원 → (26년) 1,684,20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5년) 80,380원 → (26년) 84,210원

육아
지원
활용
사업주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 위한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확대

AS-IS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큼

TO-BE

- 대체인력 지원금 단가 인상
*(25년) 월 120만원 → (26년) 202년월 130만원, 2023년월 140만원
- 사후지급분 50% **폐지·즉시 지급**

AS-IS

중소기업 노동자 육아휴직시
동료 업무부담이 커 제도 사용에 눈치

TO-BE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25년) 월 20만원 → (26년) 2023년월 40만원, 2024년월 60만원

2026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01 장애인 의무고용의 점진적 고용개선 지원을 위한 장려금 신설

AS-IS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TO-BE

상시 50~99인 의무고용 미이행사업체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시

→ 1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50% 지원

*중증남성 월 350천원, 중증여성 월 450천원

0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및 판로지원 강화

AS-IS

- 장애인 추가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지원금 한도로 추가 고용 어려움
- 영세 표준사업장의 마케팅·홍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부족

TO-BE

☑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 등 지원 강화

→ 추가 고용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표준사업장 202개소 지원(+30개소)

☑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영세 표준사업장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 일자리 안정성 확보

구직 장애인

01 저소득 장애인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

AS-IS

저소득 장애인 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 부족

TO-BE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10만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유인 제공

*3천원, 월50만원 → 월60만원(최대 6개월) 지원

02 지원고용 훈련수당 현실화로 구직활동 장애인 생계 부담 완화

AS-IS

훈련 참여 장애인의 생계 부담

TO-BE

지원고용 참여수당 일 1.8만원을 3.5만원으로

2배 수준 인상 → 구직 활동 시 생계 부담 완화

장애인 취업자

01 발달장애인 재직근로자 직무·기초 소양 교육 제공으로 직업 역량 강화

AS-IS

발달장애인 특성 상 취업 후 직무 훈련 및 직장생활 교육 지속 필요

TO-BE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자기주도 재직자훈련 제공

→ 발달장애인 고용 유지 및 안정 강화

02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적 지원 제도(근로지원인) 지원 강화

AS-IS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TO-BE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1천명→11.5천명)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2026년 확대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01 더 넓게, 더 촘촘하게 이어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프라 확충

AS-IS

- 전국 38개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중장년 고용서비스 수요 대비 부족
- 중장년 취업지원기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산적 제공

TO-BE

- 중장년내일센터 신규 지정(+2개소)
*중장년 노동시장 여건, 서비스 수요 파악하여 적합 지역 선정하고 운영기관 공모 예정
-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운영
*지역 내 중장년 취업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개인·기업 서비스 제공

02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해 내일을 잇는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AS-IS

-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 채용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 기획 운영은 매우 제한적

TO-BE

-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재취업서비스 확대 (+28백명, 5.6만명)
- 지역 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 신설

새로운
분야
일자리
희망하는
중장년

01 중장년, 새로운 내일의 기회 확대

AS-IS

- 중장년 경력 전환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 부족

TO-BE

- 중장년 경력 지원제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 제공
*(25) 본예산 810명 → (26안) 2,000명(+1,090)

02 중장년특화 교육훈련으로 중장년 이·전직을 지원

AS-IS

-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장년의 이·전직 수요 적극 지원 필요

TO-BE

- 중장년특화 직업훈련 인원 확대
*(25) 본예산 2,800명 → (26안) 7,700명(+4,900명)

03 미충원을 높은 일손부족 일자리와 50대 이상 퇴직자를 매치

AS-IS

- 미충원을 높은 업종, 구인난 해소 필요
*제조업(16.3%), 운수 및 창고업(27.7%)
- 50대 고용률 15개월 연속 하락 추세

TO-BE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
*중장년 훈련 일경험 → 일손부족 업종 취업 → 장기근속 시 근로자에게 최대 360만원 지원

계속
일하고
싶은
중장년

원하는 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지원

AS-IS

- 60세 정년도래자 계속 고용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TO-BE

- 「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지방소재 계속고용기업은 우대지원(월 +10만원)

2026년 확대되는 직업훈련 사업



중소기업

01 대·중소 상생 AI 훈련 확대

AS-IS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부재

TO-BE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30개소)

02 중소기업 맞춤형 AI 컨설팅 → 훈련 패키지 지원

AS-IS

중소기업 AI 훈련 밀착지원 부족

TO-BE

- 찾아가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훈련 컨설팅 확대(+8,000개소)
- 중소기업 현장문제해결식(PBL)
AI 훈련지원(600개소)
- 재직자 AI 기초과정 10만명, AI 융합과정 3만명

구직자

01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AI 실무 융합 전문가 양성 확대

AS-IS

AI 전문 인력 양성 유인체계 부족

TO-BE

AI 및 비수도권(월 최대 수당 80만원) 훈련 우대

02 지역·산업별 맞춤형 AI 훈련

AS-IS

데이터센터 등 AI 전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 부족

TO-BE

AI 전환 등 대응 지원 확대(24,000명)

03 일반훈련 과정에도 직무 + AI 과정 확대 보급

AS-IS

AI 훈련 유인 체계 부족

TO-BE

AI 훈련 시 훈련비 우대(56,400명)

장비·교사 등 훈련 인프라

01 AI 훈련 인프라 구축·공유 확대(플리텍)

AS-IS

개별 학과 중심 AI 교육

TO-BE

- 지역 기업과 연계한
AI 융합 바이오 교육센터 신설
- 피지컬 AI 공장 교육 테스트베드 구축(4개소)
→ 지역 기업·대학과 공유

02 AI 교육·훈련 교강사 양성(한기대)

AS-IS

AI 훈련 교·강사 부족

TO-BE

AI 교·강사 양성(500명)

2026년 확대되는 청년지원



기회 확대

01 청년 구직활동 부담 완화로 구직여건 개선

AS-IS
구직활동 중 청년의 경제적 부담

TO-BE
구직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인상**
(50 → 60만원, 최대 6개월)

AS-IS
자격증 취득 수요 지속

TO-BE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 78.7만명)

02 청년채용장려금 및 일경험 지원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

AS-IS
빈일자리 업종만 지원

TO-BE
비수도권 중소기업 60만원(12개월)
+ 청년 2년간 **480~720만원 지원**

AS-IS
수시·경력직 채용 강화로
일경험 수요 증가

TO-BE
인턴·프로젝트 등
민·관 협업 기반 일경험 기회 지속 제공(4.3만명)

맞춤 지원

01 취업 희망 고교재학생 맞춤형 훈련 확대

AS-IS
일반고 취업희망자 맞춤 훈련 부족

TO-BE
취업 희망 **일반고 3학년**
맞춤 훈련·훈련비 지원 확대(6,300명, 월 20만원)

AS-IS
직업계고 신기술 훈련 수요 증가

TO-BE
직업계고 재학생 **신기술 민간전문기관**
훈련 프로그램 제공(125억, 95개 학과)

0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강화

AS-IS
재학생·졸업예정자 위주 취업지원

TO-BE
미취업 졸업생·지역청년
집중지원, 1:1 상담·취업 프로그램 제공(20.5만명)

쉬웠을 집중 지원

쉬웠을 청년 등 맞춤형 특화 지원

AS-IS
구직단념 및 쉬웠을 청년 증가

TO-BE
일차상담, 진로탐색 등 **자신감 회복 지원**(1.3만명)

AS-IS
쉬웠을 청년 발굴·지원체계 부족

TO-BE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센터 지정
쉬웠을 특화프로그램 운영(10개소, 60억)

AS-IS
경계선지능 청년 맞춤 지원 부재

TO-BE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진로설계·구직기술 지원**(200명, 3억)